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한 대학 산학협력단 역량강화방안

김석호 | 한국학술진흥재단 산학협력팀장

Ⅰ. 들어가는 말

지난 7월 말 한양대학교가 국내 대학 중에서 최초로 현금 15억 원과 기술 약 20억 원 등 35여억 원의 자본금을 지닌 'HYU홀딩스'라는 산학협력 기술지주회사의 설립 인가를 신청하여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인가받았다는 소식은 대학기술이전을 위해 노력하는 산학협력단 관계자들에게 희망과 고충의 변주곡으로 들렸을 것이다.

과연 대학이 기술이전을 통해 돈을 버는 것이 대학 본연의 사명에 부합하고 나아가 대학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일까? 본래 대학이라는 영어 'university'는 라틴어인 'universitas'를 어원으로 하며, 그 원래의 의미는 '우주', '사회', '전체' 등을 나타내는 단어이다. 중세 초기에 대학은 배움을 찾아 도시로 몰려들었던 교사와 학생의 집단 전체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었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교수와 학생이 주체가 되는 '학문의 전당'의 의미가 확립되었다. 그러나 지식사회가 고도화되어 가는 현대 사회에서 대학은 교육과 연구라는 전통적인 학문의 사명에 더해 공동체에 대한 봉사기능, 즉 지식을 행동으로 전환하고 사회에 결과를 제공하는 세 번째 사명을 요구받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University of California)의 총장을 역임했던 커(Clark Kerr) 교수는 1963년도에 출판한 『The Uses of the University』라는 저서를 통해 현대의 대학들이 진리의 상아탑(ivory tower)을 추구하는 교수와 학생만으로 이루어진 '단일한 대학(university)'에서 여러 가지 사명을 추구하며 다양한 기능을 통해 사회에 봉사하는 '다양한 대학(multi-versity)'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역설하기도 했다.[1]

1980년대에 접어들어 미국 대학과 사회 사이의 관계를 가장 크게 변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대학의 사회적 책임과 공익에 대한 논쟁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바로 바이-돌 법(Bayh-Dole Act)[2]이라고 할 수 있다. 바이-돌 법은 연방정부가 지원한 연구개발과제의 성과로 도출된 지식재산의 소유권을 대학이 소유하고 또한 기술이전을 통해 기술료(또는 로열티 royalty)를 받을 수 있도록 특허정책을 통일했다. 바이-돌 법령의 제정 이후로 기술이전조직(Technology Licensing Office)을 설치·강화하는 연구중심대학들이 증가했다. 물론, 바이-돌 법이 제정되기 이전부터 스탠퍼드대학교를 필두로 해서 MIT, 캘리포니아대학교 등은 기술이전조직을 갖추고,

1) Clark Kerr, The Uses of the University (Cambridge, M.A.: Harvard Uni. Pr., 2001).

2) 바이돌-법(Bayh-Dole Act)은 United States Code(USC), Title 35, Chapter 18.로 제200조부터 제212조로 바이돌법은 입법목적(제200조), 정부지원 연구성과물의 지적재산 귀속(제202조), 강제실시권(제203조), 미국 기업의 우대(제204조), 정부권리보유발명의 보호(제205조, 제207조, 제209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210조, 제211조)로 구성되어 있다.

대학 연구자들이 우수한 특허를 보다 많이 낼 수 있도록 장려하며, 보유한 기술을 기업에 이전하고, 대학기술창업을 촉진하는 등 다양한 노력들을 펼치고 있었다. 대학기술의 잠재력은 1970년대 초반 스탠퍼드대학교를 중심으로 샌프란시스코 만의 남부에 조성된 실리콘밸리의 발전상에서 확인할 수 있다.

1990년대에 접어들어 제안된 새로운 대학의 모델로는 '기업가적 대학(entrepreneurial university)'을 들 수 있다. 기업가적 대학의 패러다임은 대학이 외부와 내부의 환경 변화가 연구, 강의,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 점에 주목하고 있는데, 스밀러(W. R. Smilor) 등은 미국에서 대학과 산업 사이에 형성된 다양한 연계 메커니즘, 즉, 조인트벤처, 창업보육센터, 우수연구센터, 산학협동연구센터, 기술이전조직 등을 제시하고 있다.[3] 기업적 대학의 모델은 상아탑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생산과 기술혁신의 새로운 원천으로 거듭남과 동시에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수익을 추구하는 현대 미국 대학들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Ⅱ. 대학 산학협력의 현황과 문제점

미국의 여러 우수 연구중심대학들이 기업가적 대학의 모델을 추구하며 연구성과의 사업화를 통해 기술혁신과 지식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그렇다면, 국내 대학들이 추진하는 산학협력 그리고 대학기술의 사업화는 어떤 수준에 와 있을까? 지난해에 출간된 『IBM 한국보고서』는 국제 경쟁력을 높이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현대 지식경제의 핵심인 우수한 지식과 기술의 창출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현재 우리나라는 성과가 낮은 R&D, 무늬에 불과한 산학협력, 미약한 기술 국제표준화, 부족한 혁신인력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4] 치열해지는 국제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선진국 기술 모방 전략을 뛰어넘는 새로운 연구개발 전략이 필요하며, 특히,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에게 첨단기술의 확보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기 때문에 대학의 기술개발능력과 산학협력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대학은 박사급 연구인력의 약 67%가 연구하고 있는 기술의 보고(寶庫)라는 점은 국제경쟁력을 위해 원천기술을 확보하고자 하는 기업에게 있어서 최고의 파트너가 될 수 있다. 국내 대학의 특허 출원 및 등록건수는 최근 3~4년 동안 급격한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데 특허출원의 경우 2005년도에 2천8백6십1건에서 2006년도에는 4천6백3십5건으로 83.2%나 증대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5] 대학들이 특허 등 지식재산 창출에 힘을 쏟는 이유는 국가적으로 연구개발 투자의 성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대학들 스스로 연구개발성과의 활용과 산학협력을 통한 수익창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아래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대학의 기술이전 실적은 선진국에 비하면 미약한 수준이지만 산학협력단이 본격적으로 설치되기 시작한 2004년 이후로 해마다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은 대학과 기업 모두에게 있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지식경제부가 KAIST, 포항공대, 고려대, 연세대, 한양대, 서울대 등과 같은 대학의 기술이전조직의 역량을 선진 대학 수준으로 끌어올리고자 커넥트코리아사업(Connect Korea)을 시행하고 있는 것도 대학과 기업 간의 상생협력이 갖는 경제적 가치, 즉 기업의 기술경쟁력을 높이고 나아가 고용을 창출한다는 가능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증대되어가는 산학협력 및 기술이전 실적에 비해 대학 산학협력단의 조직역량과 전문성은 아직 미약한

3) W. R. Smilor, G. Dietrich, and D. Gibson, "The entrepreneurial university: The role of higher education in the United States in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and economic development. International Social Science Journal, Vol 45 (1993), pp.1~11.

4) IBM, 『IBM 한국보고서』(서울: 한국경제신문, 2007).

5) 한국학술진흥재단, 『2006 대학산학협력백서』, p.2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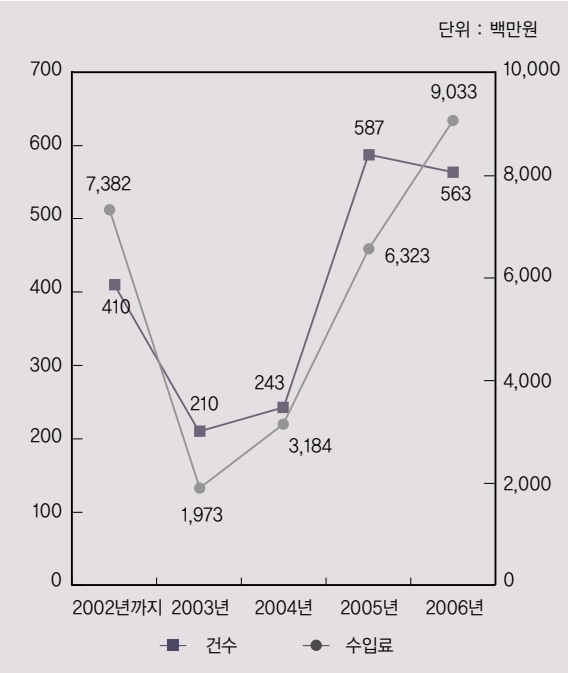

그림 1. 2002~2006 국내 대학의 기술이전 실적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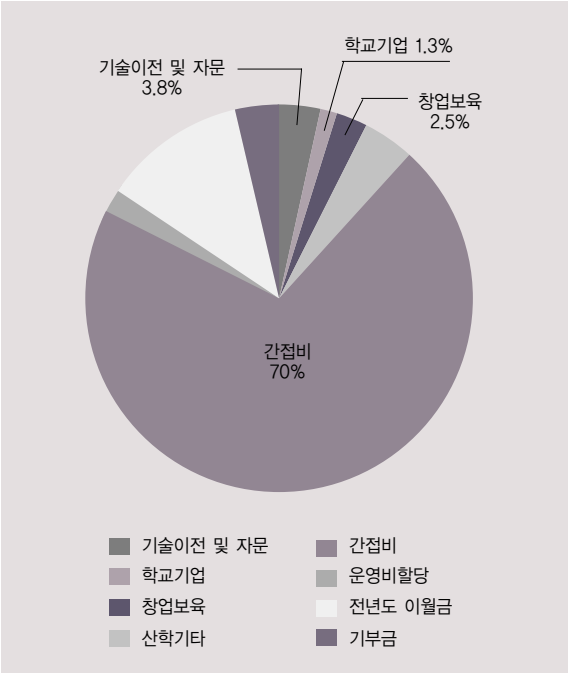

그림 2. 2006년도 국내 대학 산학협력단의 수익창출 현황

상태에 있다. 한국학술진흥재단이 2007년도 상반기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6], 국내 134개 대학의 산학협력단에는 평균 15.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연구진흥, 연구지원, 산학협력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대학의 정규 교직원(38%)보다는 계약직(62%)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구관리 및 산학협력 업무의 전문성은 아직까지 미흡한 상태인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대학이 보유한 특허와 노하우 등을 전략적으로 관리하고 기업에게 이전하여 로열티를 받는 기술이전 · 사업화 업무를 위해서는 변리사, 기술거래사, 기업기술가치평가사 등과 같은 전문가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일부 대학들만이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그림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산학협력단의 수익구조는 대부분 간접비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다행히도 2006년도에 산학협력단들의 산학협력활동(기술이전, 기술자문, 학교기업, 창업보육 등)을 통한 수익은 평균 1억7천5백만 원(전체 수익의 11.7%)에 이르러 2005년도의 7.1%에 비해서는 향상되었으며, 간접비가 차지하는 비율도 76.2%에서 70%로 줄어들었다. 앞으로 산학협력단은 연구과제의 간접비에 의존하는 비율을 줄이고 기술이전 등 산학협력활동을 통한 수익의 비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미국의 경우는 바이-돌 법 이외에도 스티븐슨-와이들러 법(Stevenson-Wydler Technology Innovation Act)[7], 국가경쟁력 기술이전법(National Competitiveness Technology Transfer Act of 1989)[8] 등과 같은 법령을 통해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기술혁신 정책들을 시행해 왔다. 특히, 1988년 레이건 대통령에 의해

6) 한국학술진흥재단, 『2006 대학산학협력백서』.

7) 스티븐슨-와이들러 법(Stevenson-Wydler Act)은 United States Code(USC), Title 15, Chapter 63.으로 대학, 비영리기구, 연방연구소에서 수행되는 연구활동과 이를 통해 개발된 기술을 효과적으로 산업체에 연계시키는 정책을 골자로 하고 있다.

8) 옴니버스 무역 및 경쟁력 법(Omnibus Trade and Competitiveness Act of 1988)은 Untied States Code(USC). Title 15. Chapter 7.으로 미국 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가표준기술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를 현대화하고, 첨단기술에 대한 민간영역의 자본투자를 지원하고, 산업적인 응용을 최적화할 수 있도록 대학 · 기업 · 연방연구소 사이의 협력을 증진시키는 정책을 골자로 하고 있다.

비준된 '옴니버스 무역 및 경쟁력 법(Omnibus Trade and Competitiveness Act of 1988)'에 포함되어 있던 고등기술프로그램(Advanced Technology Program, ATP)은 기초연구와 응용연구의 영역을 넘어 산업화를 위한 공적 벤처자금기능으로까지 정부의 지원을 확대했다.[9] 즉, 새로운 상품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술 및 시장 지식을 결합하는 기술혁신의 관점에서 다양한 연구를 통해 도출된 기술들을 시장의 요구에 맞게 결합하고 상품화·산업화하는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시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지원정책과 대학의 주체적인 노력이 결합되면서 미국의 우수 연구중심대학들은 명실상부한 '기업가적 대학'으로 발전하게 된 것이다. 미국 주요 대학들의 기술사업화 실적을 정리해보면 다음 표와 같다. 특히, 컬럼비아대학교의 회수율은 무려 26%를 상회하고 있어 여러 대학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미국 주요 대학들과 비교했을 때, 국내 대학들의 산학협력과 기술사업화 실적은 상당히 미흡한 수준이다. 물론, 국내 대학들과는 R&D의 규모에 있어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잣대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대학에 투입된 R&D 자금 대비 기술이전 수입료의 비율(R&D 회수율)이라는 지표를 활용해 비교한다고 하더라도 아래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표 1. 미국 주요 대학들의 2007년도 기술사업화 실적 현황[10]

(금액단위: 백만 달러)

대학명	R&D	발명신고	특허출원	기술이전	수입료	spin-off	R&D 회수율	전담인력
Cornell	600	235	220	73	8	2	1.33%	29 (17)
Harvard	600	250	160	25	20.9	10	3.48%	30 (17)
Johns Hopkins	1,100	363	329	78	10.2	15	0.93%	37 (25)
Columbia	600	272	160	72	160	10	26.67%	41 (26)
MIT	1,027	487	314	95	136	24	13.24%	29 (15)
Stanford	930	418	300	77	50.4	10	5.42%	38 (22)

* R&D 회수율 = 기술이전 수입료 / R&D

** 전담인력의 괄호 안은 특허평가 및 라이센싱 전문인력의 숫자임

표 2. 국내 주요 대학들의 2006년도 기술사업화 실적 현황

대학명	R&D(백만 원)	수입료 (백만 원)	R&D 회수율(%)		
			2006년	순위	2005년
서울대학교	262,595	1,362	0.59	9	0.761
연세대학교	157,763	890	0.601	8	0.664
한국과학기술원	115,429	853	0.76	5	0.587
포항공과대학교	93,175	643	0.695	6	0.356
한양대학교	90,853	422	0.521	11	0.309
강원대학교	26,753	376	1.587	1	0.742
고려대학교	81,178	365	0.517	12	0.993
성균관대학교	88,230	317	0.411	14	0.296
전남대학교	77,281	302	0.436	13	-
건국대학교	55,598	283	0.594	7	0.408
충북대학교	34,805	259	0.832	4	-
부산대학교	63,950	203	0.351	15	-
중앙대학교	48,777	203	0.575	10	-
서울시립대학교	26,854	201	0.847	3	-
서강대학교	24,356	187	0.953	2	0.981

9) 한국학술진흥재단, 『2006 대학산학협력백서』, pp.414-418.

10) 한국학술진흥재단, 「미국 대학 선진 TLO 연수보고서」. (2008.2)

국내 대학들의 회수율은 강원대학교를 제외하고는 모두 1% 미만일 정도로 미흡한 수준이기 때문에 정부와 대학 당국의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부존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우수한 인재와 기술혁신을 통해 무역흑자를 늘리고자 노력하는 우리나라에 있어 대학의 기술개발능력과 산학협력이 갖는 가치는 우리나라의 기술무역 적자 규모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2007년 말 과학기술부가 발표한 〈2007 기술무역통계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06년도에 기술수출로 18억9천7백만 달러를 벌어들이고 48억3천8백만 달러를 기술을 수입하는데 지출함으로써 29억4천1백만 달러의 기술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기술무역수지 적자규모는 2003년 24억2천만 달러에서 2004년 27억3천만 달러, 2005년 29억 달러로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기술무역수지 적자를 줄일 수 있는 원천기술의 개발의 중요성과 이를 위한 산학협력의 필요성을 더 절실히 느끼게 하고 있다.[11]

Ⅲ. 산학협력 우수사례들

교육과학기술부와 지식경제부가 시행하며 한국학술진흥재단이 전담하고 있는 커넥트코리아사업은 대학의 산학협력활동과 기술이전실적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대표적인 산학협력 활성화 사업 중의 하나이다.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이며, 기술이전성과가 우수한 18개의 주관대학과 더불어 34개의 참여대학이 지원을 받고 있다. 커넥트코리아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대학들은 산학협력과 기술이전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하고 창의적인 프로그램들을 개발해 왔다. 이 프로그램들은 목적에 따라 크게 연구개발 성과관리 활동, 기술이전 활성화 활동, 산학 간 교류 증진 활동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분야별로 대표적인 사례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한양대학교는 보다 전략적으로 연구개발성과를 관리하기 위해 변리사 3명을 채용하여 BT, NT, IT 분야별로 우수 연구실에 대한 특허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DB로 구축하여 기술이전 마케팅에 활용하고 있다. 연세대학교의 경우는 보유하고 있는 특허 중 우선적으로 4개 기술군(Mg Alloy, 3D 그래픽, OFDM, 진단기술)의 특허 포트폴리오 평가를 실시하여 기술이전 마케팅에 활용하고 있다.

기술이전을 활성화하기 위한 활동 중에서는 대표적으로 기술설명회 및 기술상담을 꼽을 수 있다. 커넥트 코리아사업 수행대학들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유망기술들을 기술을 필요로 하는 기업들에게 설명하고 기술이전 가능성에 대해 토론하는 기술설명회를 연간 2~3회 이상 개최하고 있다. 특히, 2007년 10월에는 총 42개 대학들이 상반기에 특허출원한 3천 건의 '미공개 신기술'[12]에 대한 투자박람회를 공동으로 개최하였는데 대학의 신기술을 도입하고자 하는 300여 기업이 참여하였고 약 500건의 기술에 대해서 기술이전 상담이 진행된 후 현재까지 합계 7억 원이 넘는 기술이전계약을 성사시키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나아가, 올해 11월에는 대학의 미공개 신기술뿐만 아니라 R&D 역량이 우수한 대학 연구소들을 한자리에 모아 대학의 연구력과 기술이 필요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상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KAIST의 경우는 '기술종합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기술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자문 및 기술지도, 신기술 재교육, 애로기술 해결 지원을 통해 기업의 기술경쟁력을 제고함과 동시에 보유 기술의 이전을 촉진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마지막으로 산학 간 교류를 증진하기 위한 활동으로서 강원대학교, 포항공과대학교, 인하대학교, 광주과학기술원 등은 지역 내 기업 CEO들과 대학 연구자들이 대학의

11) 2006년 우리나라의 수출은 3천2백5십억 달러, 수입은 3천1백억 달러를 기록함으로써 무역수지는 1백5십억 달러의 흑자를 달성함.

12) 특허는 출원 후 1년간은 비공개 상태로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한국특허정보원 DB 등을 통해 검색할 수 없음. 따라서, 공개되지 않은 대학의 첨단기술에 대한 기업들의 수요는 앞으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유망기술, 기술 및 시장의 동향 등에 대한 토론하는 CEO 포럼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교류활동은 장기적으로 기술이전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인사교류, 인력양성, 공동연구개발 과제의 기획 등 산학협력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Ⅳ. 맺는 말: 산학협력단 역량 강화를 위한 제언

국내 대학들이 상아탑에만 안주하지 않고 지식생산과 기술혁신의 새로운 원천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교육과 연구라는 전통적인 역할뿐만 아니라 산학협력을 통해 대학과 사회의 상생발전을 추구하는 기업가적 대학 모델의 정립이 필요하다. 대학이 새롭게 탄생하기 위해서는 무작정 선진국의 대학 또는 몇몇 우수한 대학들의 외양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대학 스스로의 사명과 목표를 명확히 해야 한다. 대학이 처한 현실과 역량에 대해 면밀한 성찰을 통해 성공전략을 짜고, 지식을 행동으로 전환하기 위해 대학운영 시스템뿐만 아니라 구성원의 태도와 의지까지도 혁신하는 총장과 산학협력단장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산학협력과 기술이전활동이 상업적으로 편향되거나 학문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기업가적 대학 모델을 추구하기 위해 필요한 과제들 중에서 시급한 과제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문가 중심의 조직운영체계를 정립해야 한다. 산학협력과 기술이전은 우리나라 대학의 전통적인 업무영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관련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매우 부족하다. 전문가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부에 있는 핵심인력들을 산학협력단에 배치하여 교육시키는 방안과 더불어 적합한 전문가를 적극적으로 영입하는 양방향의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연구관리, 산학협력, 그리고 기술이전은 지역사회와 산업계와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통해서만 성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자격을 갖춘 외부 전문가가 대학이라는 조직에서 뿌리내리고 일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커넥트코리아사업을 수행하는 대학들에게 기술이전 전문가를 채용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보조하는 것은 바로 산학협력단이 전문가 중심의 서비스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대학이 보유한 다양한 자원에 대한 전략적 관리가 필요하다.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 대학들의 연구역량은 상당한 수준으로 발달했다. SCI급 국제학술지에 실린 논문 수는 2006년 기준으로 세계 11위를 차지할 정도가 되었지만[13], 이렇게 고양된 연구역량을 기술개발역량으로 전환하고 사회로 이전시키기 위한 관리역량은 아직 미흡한 수준이다. 대학과 기업이 무늬뿐인 협력이 아니라 실질적인 산학협력의 길을 개척하기 위해서는 대학들도 전략적 기술경영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R&D 성과와 개발된 기술에 대한 관리를 아우르는 통합시스템을 갖추는 것은 기업가적 대학의 모델을 위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역량과 기술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와 엄밀한 평가를 통해 기술이전전략을 세우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요소이다. 또한,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연구자 · 연구소와 산학협력단 사이에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기초한 장기적인 연구진흥정책을 시행하는 것도 중요한 성공전략이 될 수 있다. 특히, 요즘 대학들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기술지주회사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학이 보유한 인력과 기술에 대한 전략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셋째, 대학 연구자와 산업체 인사와의 교류와 협력의 기회를 확대하는 것도 장기적으로 수요지향적 R&D 역량을 키우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최근 들어 P&G, Intel, IBM 등과 같은 세계적인 기업들뿐만 아니라 국내 여러 기업들도 C&D(Connect and Develop)[14]이라는 새로운 연구개발 모델을 도입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기

13) 한국학술진흥재단, 「한국연구자의 2006년도 SCI 인용지수 분석연구」. p.9.
14) 국가균형발전위원회,『국부창출을 위한 新산학협력과 제4세대 R&D』.

업들이 자신의 연구개발역량과 외부의 역량을 결합시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창출하려는 시도는 기술이전성과를 향상시키고자 노력하는 대학 산학협력단에게 있어 커다란 활력소가 되고 있다. 산학협력단이 중심이 되어 대학 기술에 관심을 갖고 활동하는 산업체 인사들이 대학의 우수한 연구자 · 연구소와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다면 창의적인 지식과 기술이 창출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위에서 언급한 리더십과 전문가 중심의 조직운영이라는 과제를 보다 빠르게 완수하기 위해서는 결재라인을 간소화하고,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정립하는 등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 조직의 성패는 조직구성원의 신념과 의지, 즉 마음에 달려 있기 때문에 각고의 노력을 통해 거둔 성과에 대한 강력한 보상정책이 필요하다. 기술이전 성사에 따른 성과급 제도가 이미 관련 법령에 명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커넥트코리아사업을 수행하는 대학들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매우 다행스러운 현상이다.

마지막으로, 산학협력단들 사이의 정보교류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대학별로 서로 다른 특성, 역량, 그리고 조건에 부합하는 창의적이고 다양한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타 대학의 성공사례, 실패사례, 고민거리 등에 대한 정보와 의견을 활발히 교류하며 배워야 한다. 미국의 대학기술이전협회(Association of University Technology Managers, AUTM)에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3천5백 명 이상의 기술이전 전문가들이 회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는데, 매년 수차례의 세미나를 개최하고, 관련 학술지와 단행본을 지속적으로 발간하고 있다는 사실은 기술이전 활동에 있어 정보교류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도 (사)한국대학기술이전협회(회장: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장 이종태)가 2004년도에 결성되어 있어 다양한 기술이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정보교류의 장이 되고 있다. 또한, 한국학술진흥재단은 최근에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원을 받아 '산학협력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하였고, 산학협력단의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교육, 산학협력단 사이의 정보교류, 산학 간 교류 활성화 등과 같은 다양한 활동들을 전개할 계획이다. 대학들이 스스로 '기업가적 대학' 모델을 정립하기 위해 치열하게 노력하고, 정부는 이를 강력한 활성화 정책으로 뒷받침함으로써 이제 우리나라도 산학협력 강국으로 도약하게 되기를 기대해 본다.

필 · 자 · 소 · 개

김석호

서울대학교 서양사학과 박사과정에 있으며 한국학술진흥재단 산학협력팀장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저서 및 논문으로는 「국부창출을 위한 新산학협력과 제4세대 R&D, 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07」(공저)와 「2005 대학산학협력백서」(공저), 「2006 대학산학협력백서」(공저), 「산학협력의 동인과 영향에 대한 경험적 연구, 한국학술진흥재단, 2007」(공저) 등이 있다.